

덴마크 및 미국에 대한 DAC 동료검토(Peer Review)의 시사점*

최 수 영 KOICA 정책총괄팀 전문관

목 차

- I. 서 론
- II. 2011 덴마크 동료검토(Peer Review)
- III. 2011 미국 동료검토(Peer Review)
- IV. 시사점 : 2012 한국 동료검토를 준비

I. 서 론

1. 검토배경

2009년 11월 25일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에 24번째로 공식 가입했다. DAC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9년 “특별동료검토(Special Peer Review)”라는 이름으로 동료검토와 비슷한 내용으로 DAC 심사를 받은 적이 있다. 동 검토에서 한국은 원조전략 마련, 규모증대, 운용의 효율성, 질적개선 등 많은 부분에서 권고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였다.

이제 2012년 한국은 DAC 가입 후 처음으로 동료검토(Peer Review)¹⁾를 받을 예정이다. 동료평가는 OECD DAC이 국제사회에서 원조규범을 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사실상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한 각 회원국의 원조 특성, 모범사례 및 실패사례의 공유를 통하여 회원국 간 상호 이해와 상호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 본 원고는 KOICA 정책총괄팀 김정민(이대 국제대학원), 심지혜(고대 정치외교) 2011년도 하반기 인턴의 기초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임.

1) 2012년 DAC 동료검토 대상 국가는 EU,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한국 순서이다.

2012 DAC 동료검토는 약 20년의 개발원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첫 국제사회의 평가이자, 그동안의 성과를 외부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이자 위기이다. 2012년 5월 검토를 위한 메모랜덤 작성부터 최종 보고서 발간까지 일련의 과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2011년에는 덴마크, 미국, 네덜란드, 그리스, 스페인 총 5개국이 동료검토를 받는다. 이중 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 규범 형성 및 이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등생 국가인 덴마크와 최대 원조액 지원국으로서 개발분야에서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동료검토를 살펴보고자 한다.

원조의 질적 우수국가 덴마크와 양적 최대국가 미국의 동료검토 결과를 살펴봄으로서 향후 한국 원조의 발전 방향을 예상해보고, 1년도 남지 않은 2012년 한국의 DAC 동료검토를 대비한 중간 점검을 하고자 한다.

2. DAC 동료검토의 이해

DAC는 양자 공여국들이 모여서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관심이나 우려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는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중요 목적은 좋은 관례를 교환하고 조화(Coordination)와 협력(Collaboration)의 촉진을 통해, 개발 원조의 모든 분야에서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에 매년 OECD DAC은 4~5개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동료검토를 실시한다. 개별 회원국으로서 는 평균적으로 매 4년에서 5년마다 자국의 개발협력 시스템에 대한 타회원국의 검토를 받게 되는 것이다. 검토를 통해 향후개선을 위한 권고사항들(Recommendations)과 제안들(Suggestions)이 제시된다. 이러한 조치들이 개별국가의 정책,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나아가 회원국들의 실제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 과정들을 만든다.

Peer Review의 주요 목적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주요 목적	DAC 회원국들의 개발협력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을 모니터하고, 국내외적 목적(Objective)들과 같이 DAC에서 합의된 목표(Goal)와 정책에 대한 그들의 효과성을 검토. 상호학습을 통해 각각의 그리고 집단적 원조 실행의 향상. 좋은 사례들을 확인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조화 촉진.
-------	------------------------------------------------------------------------------------------------------------------------------------------------------------------------

동료검토는 주심사국(Examining Country)당 2~3명, DAC 사무국에서 2~3명, 그리고 인도적 지원 전문가로 구성된다. 검토대상국이 동의할시 비회원국이 옵서버로 참여할 수도 있다. 동구성원들은 성공적인 동료검토를 위하여 모든 레벨에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팀 협력의 정신으로 상호작용한다.

동료검토는 다섯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DAC 동료검토 이행 절차】

<p>준비와 계획 (Preparation and Planning)</p>	<p>DAC 사무국은 동료검토를 위한 계획(검토대상국(reviewed Country) 및 심사국(Examiners) 등) 및 관련 절차, 의무사항을 발표함. 동료검토의 주요기초자료가 될 40쪽 내외의 메모랜덤(Memorandum) 및 관련문서를 작성 제출함. 기타 관련자료 및 동료검토를 위한 비용 제불 그 외 옵서버 국가 참여 가능 검토, 확정</p>
<p>사실확인, 분석 그리고 보고서 작성 (Fact-finding, Analysis & Report Writing)</p>	<p>관련자료 수집 및 사실확인(Fact-finding) 등을 통해 총 6가지 지표로 동료검토 실시. 대상국 본부 및 개발협력 현장에서의 조사 실시 검토보고서 작성 및 사전회람을 통한 의견 수렴(OLIS 기재)</p>
<p>동료검토 회의 (Peer Review Meeting)</p>	<p>검토회의(1 day/OECD 본부)를 통해 그동안의 결과 및 주요 권고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함. 최종 권고사항 합의</p>
<p>승인과 발표 (Approval & Publication)</p>	<p>검토회의 다음 DAC 사무국, 심사국, 검토대상국이 함께하여 편집회의(Editorial meeting)에서 최종 수정 공개 및 동료검토보고서 발간 행사 개최</p>
<p>후속조치 (Follow-Up)</p>	<p>동료검토 회의 이후 18~24개월 이후 DAC 의장 및 사무국 고위급대표가 검토대상국을 방문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협의 진행을 통한 중간점검(Mid-term review) 이행 방문 전 검토대상국은 이행경과 및 계획 등의 자료 사전 제출 방문이후 중간점검 보고서 제출</p>

II. 2011 덴마크 동료검토(Peer Review)

덴마크의 동료검토(Peer Review)는 크게 ①개발협력의 전략적 방향, ②원조를 넘어 개발, ③원조 규모, 채널, 분배 ④조직과 관리 ⑤원조효과성 ⑥인도주의적 지원 부문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부문은 동료검토를 통한 주요 결과 및 DAC의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덴마크는 1978년 이래 OECD/DAC에서 권고하고 있는 GNI대비 ODA 비율 목표 0.7%를 꾸준히 달성해오고 있으며, 개발협력관련 많은 규범을 적극 준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범 형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우등생이다.

2007년 동료검토에 이어, 2011년 3월 20일 동료검토 회의(Peer review meeting)이후 발간된 덴마크 동료검토 보고서에서 제시된 덴마크의 개발협력 활동 및 DAC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1. 전략적 방향(Strategic Orientations)

덴마크의 국제개발협력은 확고한 법적, 제도적, 정치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덴마크는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가진 인도주의적 원조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선두적인 개발협력정책을 가지고 사업을 이행함으로써 타공여국의 모범이 되고 있다.

2010년 덴마크는 새로운 ODA 추진전략 "빈곤으로부터 자유, 변화를 위한 자유(Freedom from Poverty: Freedom to Change)"를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목표를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한 빈곤감소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을 통한 변화로의 자유도 잊지 않았다. 이와 함께 ①성장과 고용(Growth and Employment), ②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인권(Freedom, Democracy and Human Rights) ③ 양성평등(Gender and Equality) ④안정과 취약성(Stability and Fragility) ⑤환경과 기후변화(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라는 5가지 우선 지원분야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전략과 우선분야의 선정은 개발협력에서의 경험과 성과에 기반한 결과이며 각 분야별로 그 타당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 체계(Legal Framework)가 존재한다.

우선지원분야	법적 체계(Legal Framework)
성장과 고용	Action plan for business, growth and development(2006) Strategy for trade, growth and development(2005) Action plan for business growth and development (2009)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Strategy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operation,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2009) Effective and accountable public sector management, Strategic priorities for Danish support to good governance (good governance/2007)
양성평등	Strategy on gender equality in Danish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안정과 취약성	2010–2015 Peace and Stabilization, Denmark's Policy towards Fragile States(2010)
환경과 기후변화	2008년 Climate Envelop를 통해 기후변화 특별기금 조성

*자료: OECD/DAC Review(2011년 5월호, 김형규 주재원) 수정 보완.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선두적인 대응을 펴왔던 덴마크는 단·장기 성과관리를 위한 소통전략과 위기관리를 위한 국내외 이슈제기와 함께 취약국에 대한 집중 지원과 별도 전략을 마련하였다.

또한 덴마크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소국·다지원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데, 현재 26개 중점지원국 수를 15개국으로 축소할 계획이다(2011년 현재 15개국 축소 완료). 중점지원국 선정은 극히 정치적 결정이나 덴마크는 그 선정에 있어 협력대상국의 개발수요(Development Needs), 덴마크와의 경제·외교적 연관성(relevance) 및 국익(Danish Interests), 그간의 지원성과(Impact and Results)이다.

□ 향후 고려사항(Future Consideration)

- Freedom from Poverty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연한 이행
- 과거 개발협력 경험에 기반하여 새로운 전략과 우선순위의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관련 직원에게 숙지시키기
- 개발협력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국제개발위원회(Council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역할 등에 재정립 및 기능 강화

2. 원조를 넘어 개발(Development beyond Aid)

원조만으로 개발을 보장할 수 없기에 OECD/DAC에서는 ODA에 함께 non-ODA도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정합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이하 PCD)을 강조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지난 동료평가에서 관련한 권고를 받은 이후 꾸준히 PCD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Freedom from poverty”를 통해 덴마크는 협력대상국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한 바 있고, 개발관련 주요 이슈인 기후변화, 안보 및 이주에 대해 전정부적 접근(Whole of the government)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회 및 행정부 정책위원회에서 개발을 핵심 고려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과 관련 국내의 정책들과 EU의 정책들 사이의 일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2007년 동료검토에서 권고된 대로 외교적 사안(Foreign Affairs Mandate)을 넘어선 영역들에서 정책 일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 향후 고려사항(Future Consideration)

- 새로운 개발협력 우선순위들(중점협력국 선정, 원조분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한 프로그램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 사용
- 이전의 철수(phasing-out) 경험들과 타공여국들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들을 적용

- 직원들에게 어떻게 위험을 평가하고 다루고 맡을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 성과(Result)에 대한 정보를 축적·유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일치된 외부 활동 보장. 국제개발위원회(Council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통한 개발에 대한 공적인 논의들을 촉진
- 개발 목표들에 있어 국내 정책들과 EU 정책들의 일치를 조정, 촉진하고 중재, 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강화

3. 원조 규모, 채널, 분배(ODA Volume, Channels & Allocation)

덴마크는 1978년 이래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ODA/GNI 0.7%를 지속적으로 달성해 오고 있으며, 2009년의 경우에도 ODA/GNI 0.88%에 해당하는 총 28억불의 ODA를 제공하고 있다. 절대적 양으로는 DAC 회원국가들 중 12번째, 비율로는 4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ODA의 지역별 배분을 살펴보면, 양자 ODA 중 75.4%가 저소득국(LIC) 이하에 지원되었으며, 61.6%가 아프리카 지역에 배정되었다(아시아:30.1%, 중남미:6.6%, 유럽:1.7%).

분야별로는, 사회 인프라(교육, 보건, 행정, 시민사회 등) 분야에 41%, 경제 인프라에 10%, 생산부문에 8%가 지원되었다.

지원형태와 관련해서는, 양자원조 중 57%가 섹터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 반면, 일반현금지원(General Budget Support) 방식으로는 5.5%가 지원되었다.

덴마크 원조의 주요 지원 형태(Modality)였던 섹터예산지원에 대해 좀 더 조심스럽고 유연한(Flexible)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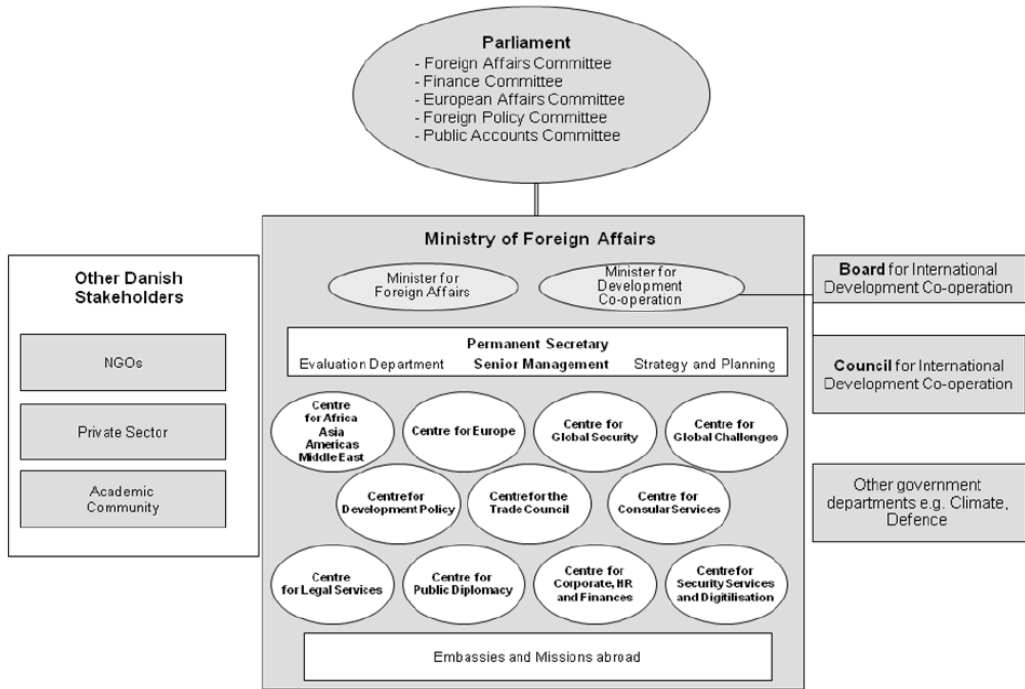
□ 향후 고려사항(Future Consideration)

- 기후변화기금(climate financing)을 ODA로 추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국제사회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바, 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국내외적 노력 강화
- 섹터예산지원(sector budget support) 외 지원(funding) 접근법을 어디에 그리고 언제 사용할지에 관한 보다 명확한 방향과 안내를 국내 직원들과 개발파트너들에게 개발하여 제시.

4. 조직과 관리(Organization and Management)

외교부 조직개편을 통해 설치된 11개의 기능별 센터(국) 중 8개가 개발협력업무와 직·간접적 연관성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외교안보정책과 개발정책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교부내의 전체 개발협력인력은 846명(2010)에 달하며, 직렬(정책, 사업집행, 국제기구, 일반직)을 구분하여 경력 및 전문성을 축적토록 하고 있다.

〈덴마크 개발협력 조직 구조〉



Source: MFA, authors' compilation.

아울러, 덴마크는 ODA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분권화 및 현장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다자사업의 경우 뉴욕, 로마, 제네바의 다자기구 대표부(Missions)에 해당 사업을 기획 및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질적 개선 및 기관 간 대화의 효율성을 상승시켰다.

양자사업의 경우도 2007년 DAC동료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일정규모이하의 사업에 대한 전적인 권한부여 등 대부분의 기능을 현장(대사관)으로 이관했다(본부차원에서는 원조관리지침을 통해 엄격한 사업관리 및 자원배분 절차, 성과관리체계 등을 제시하고 감독을 실시).

조직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현지직원채용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문 인력 채용을 강화하였다.

덴마크의 성과관리체계(Performance Management Framework)는 모든 레벨에서의 결과 보고(reporting)와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가질 수 있도록 총체적인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2007년 동료검토에서 결과에 따른 예산배정(Commitment based budgeting)을 제안하였다. 매년 국별로 설정된 목표와 타깃 성취에 따른 예산배정 시스템 구축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개발협력 사업 결과에 관한 보고서 및 자료 작성의 어려움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연가 보고 및 평가보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덴마크는 단계별로 설정된 목표 및 지표에 따라 성과 보고를 하고 있다. 또한 그 성과는 프로그램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와 현지 사무소의

견고한 보고시스템을 통해 성과가 결정된다.

그러나 개개별 지표로 측정되는 결과들이 덴마크가 설정한 5개 우선 지원분야의 성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측정하는 것은 복잡하다. 그러나 덴마크는 최소한 개별 프로그램과 모니터링시스템이 5개 우선 지원분야에서의 성과 달성에 부합되도록 설계되도록 하였고 또 관련한 연구 프로그램(Research Programme)을 2010년 착수하여 동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이 있는 결과물을 기대하고 있다.

□ 향후 고려사항(Future Consideration)

- 정책결정, 조정(Coordination), 그리고 개발을 다루는 센터와 현지 사무소들 사이에 지식공유 메커니즘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 그리고 이를 통해 직원들이 그들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게 함.
- 인적 자원 정책, 전문가들을 고용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훈련 계획들을 재검토
- 본부 및 현지 사무소는 시민사회와의 정책대화 수준과 횟수를 증대해야하며 이는 보다 정규적이고 제도화된 협의(Consultation)를 통해서 이행.

5.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파리선언(PD)과 아크라 개발아젠다(AAA) 이행의 선두주자로서 덴마크는 개별사업 지원결정시 협력대상국의 자체 개발전략과 일치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통해 최대의 가치와 효과성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2008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는 PD/AAA의 43개 이행항목 중 33개를 수용하고 이행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까지 30개에 대한 이행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성실한 이행을 위해 꾸준히 직원 역량강화 및 업무 질적 성과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

협력대상국의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을 위하여 전략적 집중(Strategic Focus), 현실적 기대치 설정(Realistic Expectations), 성과중심(Stronger Focus on Results), 협력(Joint Efforts) 강화 및 위기 및 솔직한 위기 및 희망사항 분석(Frank Analysis of Risks and Ambitions)을 강조하였다.

취약국에서 덴마크는 타공여국 및 기관과의 협력에 기반하여 더 분업에 기반한 유연한(Flexible)한 원조 이행하고자 한다.

또한 원조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계획 및 변동 가능한 5개년 예산집행계획(Rolling Five-year Spending Plan)을 협력대상국과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원조의 비구속화(untying) 노력을 통해 덴마크 전체원조의 97%를 비구속화 하였다.

□ 향후 고려사항(Future Consideration)

- 덴마크의 분권화(decentralization) 경험과 협력대상국시스템 활용, 상호책임성 강화와 같은 어려움들을 공유함으로써 원조의 효과성 제고 노력을 지지.
- 현지 사무소가 현지 환경(특히 취약국가)에 더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과 본부로부터의 지원을 확고히 함. 또한 협력을 통한 지원(joint approach)을 지지.
- 남은 비구속화를 달성하고 그 경험을 타공여국과 공유

6. 인도주의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덴마크는 지난 동료검토에서 권고되었던 대로 덴마크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전략 “Strategy for Danish Humanitarian Action 2010–2015”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에서도 인도주의적 지원에서도 덴마크가 가진 비교우위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덴마크의 전체적인 목표를 취약성(Vulnerability), 기후변화, 자연재해 그리고 분쟁의 영향을 받은 인구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특히 전략적 우선순위를 분쟁과 재난지역에서의 취약층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하였으며, 특히 여성, 국내실향문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난민(Refugee) 보호를 강조하였다.

덴마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지원 메커니즘 강화에 그 주요 가치를 두고 운영의 유동성(Operational Flexibility) 및 다른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연관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주류화를 위해 조직통합을 단행하였고 필요한 현지에 자문위원을 직접 배치하였다.

□ 향후 고려사항(Future Consideration)

- 본부와 현지 사무소에서 새로운 인도주의적 접근(모든 중점협력국에 인도주의 전문가 및 필요 인도주의적 요소 배치)의 주류화가 지속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함.
- 인도주의적 원칙들과 민간을 통한 지원(Civilian delivery) 우선 원칙이 현지에서 존중되어야 함. 특히 취약국 그리고/또는 덴마크 군대가 머물고 있는 위험지역에서 존중받도록 보장조약들을 이행.
- 재난 위험 감소를 모든 개발 그리고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에 주류로 하고 이 토픽에 관한 가이던스가 다음 단계의 국가 전략에 통합될 준비가 되도록 함.
-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그 결과를 타공여국과 공유

III. 2011 미국 동료검토(Peer Review)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료검토(Peer Review)는 크게 ①개발협력의 전략적 방향, ②원조를 넘어 개발, ③원조규모, 채널, 분배 ④조직과 관리 ⑤원조효과성 ⑥인도주의적 지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부문은 동료검토를 통한 주요 결과 및 DAC의 권고사항을 포함한다.

미국은 2001년 이후 세계최대 ODA 지원 국가이다. 이와 함께 2010년 이래 미국이 최고위급에서 개발 분야 글로벌 리더십 제고를 추진하면서 개발을 국방, 외교와 더불어 미국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격상시키고, 개발협력 이행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006년 동료검토에 이어, 2011년 7월 23일 동료검토 회의(Peer review meeting)이후 발간된 미국 동료검토 보고서에서 제시된 미국의 주요 개발협력 활동 및 DAC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1. 전략적 방향(Strategic Orientations)

몇몇 이슈를 제외하고 개발협력분야에서 주요이슈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두드러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2010년 9월 개발에 관한 대통령 행정지침(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on Global Development, 이하 PPD)을 발표하면서 최근까지 취약점 중 하나이던 범정부적인 단일의 해외원조 전략 부재문제를 해결하였다.

2010년 12월 발표된 4개년 외교개발정책보고서(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이하 QDDR)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강력한 민간파워 재건에 초점을 둔 PPD의 이행방안의 개요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2010미국 국가안보전략(U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개발(Development)을 외교(Diplomacy), 국방(Defence)과 더불어 국가 외교정책의 3대 핵심 축(일명 3D라고 부름)임을 확인하고 있다.

【미국 원조 프로그램의 지침이 되는 3대 핵심 전략 문서】

① 국가안보전략: 외교정책의 중심축으로서 외교, 국방, 개발 규정

- 2010년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개발을 전략적, 경제적, 도덕적 당면 과제로 인식하고, 개발이 외교, 국방과 더불어 국가 외교정책의 3대 핵심 축임을 확인

② 글로벌 개발에 관한 대통령 정책 지침: 개발에 관한 포괄적 접근

- 2010년 글로벌 개발에 관한 대통령 정책 지침(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on Global Development: PPD)은 개발, 외교, 국방이 국가 안보에 관한 통합되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상호 강화 및 보완을 모색하도록 함.

- 다음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추진 ▲ 지속가능한 개발성과에 정책 포커스 ▲협력대상국 주인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화된 지리적, 분야별 포커스에 맞춰 공여국간 효율적인 노동 분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작업 모델 추진 ▲정부 내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체제(architecture) 모색

* 대통령 행정지침을 원조 프로그램을 위한 전략 및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2010.10월 새로운 글로벌 개발에 관한 기관간 정책 위원회(Inter-Agency Policy Committee on Global Development) 수립

③ 2010년 4개년 외교개발정책보고서(QDDR): 시민 힘으로 주도

- 4개년 외교개발정책보고서(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QDDR)는 변화하는 글로벌 지정학적, 경제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국무부 및 USAID의 전면적 개혁을 표명
-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강력한 민간과워 재건에 초점을 둔 PPD 이행방안의 개요를 제시
-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중심 및 모든 미 해외기관의 기여를 활용할 것을 주요 추진원칙으로 규정하고, 유연하고 신속하게 역량을 통합하여 위기를 예측, 예방, 대응하는 한편, 비용 효과성, 결과중심을 강조하고 있음.

※ 개발 프레임임 보완을 위한 3대 대통령 이니셔티브(2010.9월 발표)

- 미래 세대 부양 이니셔티브(Feed the Future initiative) :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발족한 식량안보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추진 일환
-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Global Health initiative) : 2004년 수립된 미대통령의 긴급 AIDS 구조 프로그램에 기반
- 새로운 글로벌 기후변화 이니셔티브(Climate Change initiative) : 저탄소 미래,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 축진을 위해 미 해외원조 전략에 기후변화 우려를 반영

이상의 주요 미국 정책들은 MDGs 달성 전략과 함께 원조프로그램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새로운 참여를 위한 시그널을 제공하였다.

미국 대외원조 정책의 우선순위는 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② 민주주의 ③ 거버넌스 ④ 식량안보 ⑤ 글로벌 보건 ⑥ 기후변화 ⑦ 인도적 지원 ⑧ 범분야 이슈로서 양성평등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취적 염원을 이루려면 다음과 같은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다.

개발을 외교, 안보와 같은 레벨로 격상시킨 것은 고무적이거나 개발을 외교, 안보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3D를 가장 효과적이고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균형 방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더하여 미국의 개발은 27개 정부조직에 개발원조 프로그램이 제도적, 예산상으로 분산되어 전략적, 효율적, 효과적 집행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초기 의회의 불신이 원조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향후 의회(Congress)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의회와 행정부가 동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대중적인 인지와 지지를 높이기 위해 개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향후 고려사항(Future Consideration)

-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중기적으로 달성코자 하는 목표와 결과에 관해 의회와 협의하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중적, 정치적 지지기반 강화를 위해 결과홍보 및 의회, 비정부 주체들과의 전략적 연계 강화 모색
- 개발협력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강화 및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USAID 중심으로 국내외 정책 일관성 제고를 추진

2. 원조를 넘어 개발(Development beyond Aid)

국가안보전략과 국가안보위원회를 통해 미국 개발관련 정책이 제공되었으나 이는 협력대상국 개발보다는 국내안보 이슈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국내 및 여타 외교정책과 개발관련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초래하여 혼동을 주고 있다.

그러나 2010년 PPD에 따라 미행정부가 개발 및 원조에 관한 광범위한 접근방식을 발전시키고 있다. 국가안보위원회에 USAID의 참여를 보장하여 외교, 안보와 함께 개발도 주요 외교 이슈로 승격시킬 수 있게 되었고, 기관간 정책위원회(Interagency Policy Committee)를 수립하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중심적 역할 및 관련한 정책중재 및 모니터링을 전담하게 하고 있다.

더하여 개발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제고, 반부패, 분쟁 및 취약국에서의 정부간 조율될 지원(Co-ordinated Approach)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 향후 고려사항(Future Consideration)

- 국내외 외교정책과 개발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PCD)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행정부는 핵심 우선순위 분야를 선별
- 모니터링 및 보고 채널로서 2010년 새로 설립된 글로벌 개발을 위한 기관 간 정책 위원회를 적

극 활용할 것을 권고

- 취약 상황에서의 정부간 조율될 지원 및 민간 리더십강화 지속

3. 원조 규모, 채널, 분배(ODA Volume, Channels & Allocation)

최대원조 공여국으로서 미국은 2010 총 ODA 규모는 301억불로 세계 2위 공여국과도 2배 이상의 규모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 ODA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ODA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지역의 ODA를 2배로 증액하겠다는 글레니글스 공약을 준수하였다. ODA/GNI 비율도 10년 전 0.1%에서 2010년 0.21%로 향상되어 비율에 있어서도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인 0.7% 달성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무상원조로 구성된 미국의 원조의 87%가 양자 지원이 차지한다. 저소득국가에 55%(2009년), 취약국에 46%(2009년)를 지원한다(아프가니스탄, 이라크가 20%로 대부분을 차지).

원조의 대부분은 보건(특히 HIV/AIDS), 정부 및 시민사회 강화,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에 분배되고 있다.

성과 평가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여 협력대상국의 수를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분산되고 사용처가 지정된(earmarked)된 예산은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원조프로그램의 집행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은 원조에 대한 일반 대중의 과대평가된 인식을 바로 잡기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원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원조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개발 사업을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non-ODA 자금에 대한 기록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향후 고려사항(Future Consideration)

- 2010년 수준 이상으로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
- 예산이 전략적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고, ODA 예산을 간소화하기 위해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 선택과 집중 원칙 적용에 따라 거버넌스가 취약한 저소득국 지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의
- 다자기구의 특성 및 비교우위를 존중한 지원

4. 조직과 관리(Organization and Management)

미국은 27개 부처 및 기관에서 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무부와 USAID를 제외하고도 보건

사회부, 국방부, 재무부,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s) 주요 4개 기관이 있다. 이러한 미개발협력 시스템의 제도적 분산화가 정책조율, 프로그램을 위한 보다 전략적, 통합적 접근을 저해하고 있으며 미행정부는 본부 및 현지사무소에서 원조 프로세스 간소화, 조율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으로 2006년에는 국무부와 USAID 기관사이 협력 강화를 위한 개혁을 시도하였고, 2009년에는 미행정부는 합동 계획 및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USAID 현지 사무소 주도의 다년간 국별전략 수립을 시도하였다.

USAID는 기관 역량강화, 협력대상국 주인의식 고취, 결과중심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주요 우선순위이다. 한편, 중앙 평가부서를 수립 및 2011년 DAC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전략 발표하였다.

1990년대 이래 원조규모는 크게 늘어난 반면, USAID의 직원 수는 감소하여 원조 프로그램 관리능력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2006년을 시작으로 인력역량 재건하려는 전략적 시도가 이행중이다.

□ 향후 고려사항(Future Consideration)

- 현지 개발활동의 감독, 일관성 강화위해 전정부적 국별 전략모델을 모든 현지 사업에 적용하고 사업 보고요건 간소화 및 사업계획 예산 프로세스 합리화를 위해 각 기관의 프로그램 방식 재검토
- 개혁 추진위해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본부 및 현지 사무소 직원에게 적절한 가이드언스를 제공하고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USAID 인적 자원의 강화위해 부족한 인력 선별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USAID 많은 직원의 은퇴시점 고려한 인력 조정 시간계획 수립, 현지 직원의 커리어 지원 강화

5.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지난 평가보고서에서는 파리선언의 불성실한 이행이 지적되었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국 개혁안에서는 원조효과성 관련 아젠다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예로 대통령 정책지침(PPD) 및 4개년 외교개발정책보고서(QDDR)에 따라, 원조의 비구속화 및 동분야에서의 협력대상국 역량강화를 통한 협력대상국 시스템 활용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주요 기관에서만 공유되고 있을 뿐이며 개발 관련 기관의 인식제고 및 가이드언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협력대상국 시스템 활용 방안 및 타공여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가이드언스 제공도 시급하다.

아직도 상당한 부분에 있어 구속성 원조가 남아 있으므로 미행정부는 원조구속성에 관한 의회의 조건을 철회하거나 완화해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 향후 고려사항(Future Consideration)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부합하는 개발활동의 실용적 가이드선 수립
- 공여국 간 원조조율 협력대상국시스템 사용 제고를 위해 적절한 교육 인센티브 구조 마련
- 최빈개도국, 과다채무빈국(HIPCs)에 대한 전면적 비구속성 원조를 제공하고, 비구속성 원조가 원조의 돈의 가치(Value for money)를 개선한다는 메시지를 의회 내 지속적으로 전달

6. 인도주의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미국은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세계 최대 인도적 지원 국가이나, 프로그램의 불일치(inconsistency) 문제가 남아있으며, 재난위험 감소, 수혜자 참여 그리고 재건 지원이라는 좀 더 총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간 범정부적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적 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기부 활성화를 촉구 등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혁신적 방법 모색 중이며, 인도주의 원칙, 모범사례, 돈의 가치(value for money)에 기반하여 민간 활동가와 군대 간 보다 일관성 있고 의미 있는 파트너십 이행에 노력하고 있다.

□ 향후 고려사항(Future Consideration)

- 보다 일관되고 전략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 범정부적 인도적 지원 가이드선 개발하여, 모범관행 강화, 체계적 접근 장려, 장기간 지속되는 위기상황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자원 조달을 가능케 하는 한편 난민과 대비해서 국내난민에 대한 불일치한 지원문제 해결
- 재난 위험 감소 수혜자 참여 복귀 지원에 집중하여 범정부적인 조정 메커니즘 강화
- 군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방법에 대한 새로운 범정부적 가이드선 개발
- 인도적 지원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반테러리즘 조치가 인도적 목표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용 가능한 해법 및 타협점 모색

IV. 시사점 : 2012 한국 동료검토를 준비

2012년 한국의 동료검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시간 스케줄 (변경가능)	2012년 5월 4일까지 우리측 메모랜덤 제출 2012년 6월 11~15일 평가단 서울 방문 2012년 6월 18~22일 평가단 현장 방문 동료검토 보고서 작성 2012년 12월 5일 동료검토 회의 개최 최종 보고서 발간
기타 주요사항	주요 동료 심사국 : 독일, 호주 DAC 비회원국 옵서버 참가 허용 검토를 위한 자발적 기여금 우리측 부담.

첫 동료검토를 준비하는 한국으로서는 위의 일정 및 주요사항을 주지하고 사려 깊은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타공여국의 동료검토를 비교분석하여 관련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이에 가장 최근에 실시된 질적 우수국가 덴마크와 양적 최대지원국가 미국의 동료검토 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에서 당시 제시되었던 권고 사항과 이에 대한 우리의 개선방안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로 동료검토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Indicator)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표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지만, 국제개발관련 시대적 주요 이슈에 따라 몇몇 지표는 추가·변경되기도 한다.

2009년 OECD DAC의 가입을 위해 받았던 특별동료검토에서는 ① 한국 개발협력 전반(역사, 법적 체계, 원조구조, 대중인지), ② ODA 규모, 채널 및 배분, ③ 조직 및 관리, ④ 원조효과성, ⑤ 인도주의적 지원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0년 동료검토에서는 원조를 넘어선 개발(Development beyond Aid)이라는 새로운 검토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는 현재 국제사회가 개발에 있어 원조를 포함한 포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검토 지표는 개별 국가의 개발 원조를 측정하는 주요 수단임으로 그 변화 추이를 지켜보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 동료검토에서의 지표 변화〉

2002년	2006년	2011년
전략적 구조	시스템 조직	전략적 방향
국가적 합의	국제 파트너십	원조를 넘어선 개발
국제 원조 조화	인지 강화	원조 규모, 채널, 할당
감축 인원 규모	정책 일관성	조직과 관리
효과성, 평가, 성과 중심 원조	구속성 원조	원조 효과성과 결과
정책 일관성과 내부 조화	현장 권한위임	인도적 지원
원조 규모	시스템 효율성	
국제기구 Funding 연체	성과 중심 관리	
USAID의 계약자(Contractor)와 수령인(Grantee) 관리	인력	

〈덴마크 동료검토에서의 지표 변화〉

2003년	2007년	2011년
국가 성과와 예산	정책 구조	전략적 방향
Informal 원조 타이드화	인지 강화와 지원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촉진
NGO 독립	다자간 기구 측정을 위한 공여국 조화	원조 규모와 분배
직원 한계	원조 규모	원조 관리와 이행
다자간 파트너십	지리적/분야 할당	인도적 지원
분권화	정책 일관성	
공공 여론	최빈국 원조 언타이드화	
지역주인의식	경험 공유	
컨설턴트 사용	분권화	
	결과 중심 관리	

세 번째로 지난 2009 특별동료검토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2011년 현재 대부분의 권고사항이 이행 또는 부분 이행되었다. 이행 점검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남은 시간동안 보완할 수 있도록 전정부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9년 특별동료검토를 통해 제안되었던 권고사항과 관련한 당시 우리 정부의 개선 방안을 소개하며, 2011년 8월 현재 이행여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중간 점검을 통해 향후 남은 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을 채우고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2009년 한국 특별동료검토 권고 이행사항 점검: 2011년 8월 기준〉

구 분	권고 사항	개선 방안	2011 기준	'08 이후 개선사항
1. 한국 개발협력 구조와 틀				
1-1 법률 구조	개발협력활동 전반을 포괄 하기 위한 법적기반 구축 ○ 개발협력 총괄 법률 부 재에 따른 통합적 정 책과 전략 미비 개선	○ 포괄적 ODA법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선진 국 사례, 우리나라의 특수성 등을 종합 고려 하여 도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할 과제 - 충분한 연구, 관련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포괄 입법 제정을 검토해 나갈 예정	(법률 구조)	<div>□ 이행</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ODA 기본법 제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 (2010.7.26 발효)
1-2 원조 구조	원조정책 및 전략을 총괄적 으로 책임지는 단일 조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정책, 전략을 총괄 책임지는 단일조직 구성문제는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 ○ 유·무상원조를 병행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여간상 우선은 원조정책, 집행기관간 조정기 능 강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검토 - 국제개발협력위의 역할, 기능을 강화함으로 써 기관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ODA 전 반의 조정, 감독 및 일관된 원조정책 추진 	(원조 구조)	<div>□ 부분적으로 이행</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원화 극복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 조정·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총리실 산 하 국제개발협력관실 신설 (과제)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한계로 인한 무유 상간 및 무상내 원조 분절화 고착화 - 정책 일관성 저해, 원조효과성 저해, 집 행상 비효율 문제 발생
	정책조정, 통합 전략 수립 ○ 무·유상원조 개별전략 을 실질적·유기적으로 통합 정책, 전략 수립 및 관련 국제개발협력 위의 관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 조정기능 강화 및 관계부처간 협력 하에 무상, 유상원조를 포괄하는 통합 전략의 유기적 연계성과 완성 도 제고 추진 - 기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ODA 중기 전략, 중기 개별원조전략 수립한바 있으며, 등 ODA 정책, 전략 통합 노력 계속 확대 		<div>□ 이행</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 유상 원조의 정책 조정 및 통합성 제고를 위해 무상원조 주관기관(외교부) 및 유상원조 주관기관(기재부) 지정 ○ 무상원조 분절화 개선을 위해「무상원조관 계기관협의회」구성 ○ ODA 선진화 방안 및 기본계획에 의거 통 합국별협력전략(CPS) 마련 및 유무상 통합 평가체제 구축 등 ODA 선진화 방안 지속 추진

구 분	권고 사항	개선 방안	2011 기준	'08 이후 개선사항
1-3 국민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적인 중장기 국민인식제고 전략 수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원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민인식 제고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개발협력위를 통해 범정부적 중장기 Public Awareness Strategy 수립 - 대외원조에 관한 인지도·지지도 등을 고려한 그룹별 접근과 산업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분야를 고려한 그룹별 접근 병행 검토 	(국민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시 범정부적 ODA 홍보강화 방안 의결 및 범정부 ODA 홍보 T/F 구축 ○ 2011년 통합홍보계획 확정 및 이행 ○ DAC 가입 및 HLF-4 유치 홍보 ○ ODA Korea 홈페이지 개설 및 ODA 교육원 통한 개발협력 교육 실시 ○ MBC 코이카의 꿈, 개발협력 감성콘텐츠 제작, 논문 공모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와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의 지식·전문성 활용과 원조의 책임성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 ○ 시민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정부정책 수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와 정책대화 메커니즘 구축 검토 - 시민사회 역량강화사업 실시: 개발협력 교육, 해외사업현장 방문, 프로젝트 management, 개발협력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능력 배양 지원 등 - 최근 증가하는 기업 사회 공헌(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협력 강화 * 기업 사회공헌팀과 토론회 개최(08.7) 	시민사회 협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및 학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ODA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협력전략 개발 중 ○ PPP 제고 방안 개발 중 ○ 시민사회 참여사업 확대
(정책 일관성: 3. 대외원조 조직 및 관리의 3-1 지표 세부 항목이었음.)				
3-2 관련 부처·기관 간 조율·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정책일관성(PCD) 관심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정책일관성(PCD)에 관한 정책 연구 및 향후 국제개발협력위를 통해 관계 부처간 협의 	(정책 일관성을 위한 정책 개발) (정부 기간간 정책 일관성 추진 협의체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적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연구 진행 □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없음

구 분	권고 사항	개선 방안	2011 기준	'08 이후 개선사항
2. 대외원조 규모, 채널, 배분				
2-1 대외원조 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화대 목표 확정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전적이며 실현가능한 ODA 증액 목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8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중기 ODA 확대계획으로 ODA/GNI 비율을 2012년 0.15%, 2015년 0.25%로 확대하기로 결정 	(원조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ODA/GNI 비율 0.12%, '11년 0.14% ◦ ODA 중기계획, ODA 선진화방안, ODA 기본계획을 통해 의결한 ODA 확대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25%(30억불 이상)까지 확대 ◦ 정부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정한 목표의 공약, 정부 내 최고위급의 광범위한 지원, 대중적 지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확대에 관한 정부내외 지지기반 확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위층 포함 정부내 상기 목표 이행 공유 및 ODA 관련 국민의식 제고를 통한 대중적 지지 기반 강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적으로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8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총리지시 사항 ◦ 확대계획 공표 및 홍보를 통한 국민적지지 확보
2-2 무상원조 비율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C 회원국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무상원조 비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제공시 국제사회의 채무감소 노력 고려 필요 ◦ 무·유상 원조의 최빈국, 중소득국 지원 비중 역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신흥공여국으로서 전체 원조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현 단계의 우선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분간 재원확보 측면을 고려하면서 무·유상원조를 포함한 전체 ODA규모를 확대해 나갈 필요 - 향후 점진적으로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 ◦ 한편, 우리의 경제개발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유상원조가 협력대상국 경제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평가 ◦ 저소득국은 무상원조, 중소득국(LMICs)은 유상원조 위주의 배분 전략 검토 	(원조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년 유/무상 3:7이었으나 '15년까지 4:6으로 유상원조 비율 유지 합의 (과제) ◦ 무상원조 비율 제고 필요성 등 국회/예산 당국/국민 대상 설명 등 지속 추진 □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무상원조는 최빈국 40.4% 지원 (LDCs, LICs, LMICs에 93.3% 지원) ◦ 2010년 유상원조는 39.4%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C권고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빈국 관련 무상원조 또는 최소 증여율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7 EDCF 지원조건 변경으로 향후 최빈개도국(LDCs)에 대한 모든 유상원조는 각각 증여율 90% 이상을 충족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 최소 증여율 (86%)을 '06년에 기증총합(89%), LDCs에 대한 증여율 90% 달성

구 분	권고 사항	개선 방안	2011 기준	'08 이후 개선사항
	이행 ※ 전체원조 증여율 및 ODA 승인규모 권고도 이행 필요	※ 전체 원조의 최소 증여율(86%) 조건 : 기종족 ('06년 89%) ※ ODA승인액/GNI 조건(DAC 평균에 현저히 미달 시 위배) : 중장기적으로 이행 노력		
2-3 최빈 개도국 · 기타저 소득국 지원 확대	□ 최빈국과 저소득국가 지원 비율 증대 ○ 빈곤감소 및 MDGs 달성에 중점	○ 저소득국가(LDCs 및 LICs)에 대하여 무상원조 중심으로 원조비중 확대 추진 - 다만, 저소득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경제인프라 지원은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유상원조 제공 추진 ※ 저소득국가(LDCs 및 LICs)에 대한 무상원조는 매년 점진적 향상 추세 - '05년(23.6%) → '06년(28.3%) → '07년(32.6%)	(최빈국 지원)	□ 이행 ○ '10년 소득수준 기준 최빈국에 무상원조는 40.4%로 증가 추세 ○ 아프리카 지원비중 확대 ○ 무상원조 비중 소폭 확대 ○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영중
	□ 지역별 배분 (비권고사항) ○ 원조분업을 고려하여 아프리카, 중남미 지원 검토	○ 전통적인 아시아지역 중점 지원 정책기조 유지 ○ 아프리카지역은 최빈국 밀집 지역으로 MDGs 달성 등 국제사회의 절대빈곤 퇴치 노력에 동참하여 지원을 확대 - 전략적으로 중점지원국 중심으로 질병퇴치, 농촌개발, 교육 등 중점지원 분야 위주로 지원	(원조 분배)	□ 이행 ○ '10년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대상국에 원 조분업을 고려하여 아시아 11국/아프리카 8국/ 중동.QS 2국/ 중남미 4국/ 오세아니아 1국 설정 ○ 또한, 지역 특성에 따라 분야/지원방식 차별화
2-4 중점지원 국 개선	□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명확화 및 협력대상국 단위 일화 ○ 협력대상국 선정과 원조 배분의 명확한 지침 설정 필요	○ 협력대상국 선정기준과 원조배분의 투명성 제고 위한 지원전략, 지침 수립 - 개도국의 객관적인 자료(소득수준, HDI, 거버넌스, 인구 등)에 근거한 개발수요와 정책적 고려를 바탕으로 무·유상 통합 원조 배분지침 마련 추진 ○ 협력대상국 및 중점지원국은 원조규모 확대, 개도국의 원조수요, 정책적 고려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검토·수정해 나갈 계획		□ 이행 ○ '10 무·유상 통합 중점협력국 26개국 선정 ○ 무·유상 기본계획상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중기 지원 비중(%) 마련

구 분	권고 사항	개선 방안	2011 기준	'08 이후 개선사항
2-5 중점지원 분야		※ 협력대상국 현황: 협력대상국은 무상 56개국, 유상 75개국, 중점지원국은 무상 19개국, 유상 17개국		
	◦ 무·유상원조 통합 단일 협력대상국 선정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전반적인 통합 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별원조전략 수립으로 확대·발전 추진		□ 이행 ◦ 무·유상 통합 중점협력국 26개 선정
	□ 중점지원분야 축소 및 집중 ◦ 원조분업 및 효과성 고려, 현행 7개 중점지원분야를 협력대상국별 2~3개로 축소	◦ 원조역사가 짧은 한국으로서는 원조경험 축적을 통해 우리의 비교우위와 개도국의 개발수요 등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 -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비교우위 및 지원실적, 협력대상국 개발수요 등을 종합 고려, 중점지원분야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계획 - 모든 중점지원분야를 각 협력대상국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협력대상국별 국가 개발전략, 개발수요 등 특성을 고려, 국별 소수의 중점지원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 추진 * 무상원조 19개 중점협력국의 경우 2~3개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반협력대상국도 사업발굴시 국별 특성과 비교우위를 고려, 지원대상 집중방안 검토 * 유상원조는 08~12년간 기후변화, 농업분야를 최우선 지원분야로 선정		□ 이행 ◦ CPS를 통해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와 협력대상국의 국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지원분야 2~3개 선정
2-6 다자원조 및 기타 원조방식	□ 다자원조 체제의 분산화 개선 ◦ 다자원조 제공대상 국 제기구의 수를 현저히 축소	◦ 다수 국제기구에 대한 소액 원조방식을 개선한정된 중점파트너 국제기구에 대한 중점원조방식으로 변경 검토 - 향후 ODA확대규모, 사업관리능력, 원조효과성 등 감안하여 추진	(원조 체널)	□ 부분적 이행 ◦ 중점파트너기구를 3개 선정 지원액의 70% 집중(현재 협력기구수는 약 10개로 축소) ◦ 다른 부처, 기관은 다수의 국제기구에 분

구 분	권고 사항	개선 방안	2011 기준	'08 이후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원조관련 일관된 포괄적 협력전략 도입 필요 ※ 현재 20여개 부처, 기관이 80여개 국제기구에 출자,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C 가입, 선진공여국과 정책조화 및 다자원조 경험 축적 등을 통해 포괄적 다자 원조 추진전략 수립 		담금 지원 형식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과제) ○ ODA 통합 예산심사를 통한 효율적/체계적 다자원조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타 혁신적 원조방식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지원, 분야별 접근법, 위임 협력을 통한 공여국간 파트너십 등 새로운 원조방식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의 원조규모를 고려하면서 도입 가능한 새로운 원조방식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중점협력국 위주로 가능한 방식부터 점진적으로 도입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분적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PBA 도입방안을 통해 예산지원 및 섹터에 산지원 사업 고려 중
	2-7 Cross-cutting 이슈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정책에 Cross-cutting 이슈 반영 점진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양성평등, 인권, 거버넌스 등 cross-cutting 이슈의 원조사업에서 주류화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여성, 인권 등 cross-cutting 이슈 지원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개도국의 기후변화적응 지원을 대폭 확대 ※ 08-12년간 동아시아지역에 2억불 지원 예정(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인권, 거버넌스 분야도 다자 및 양자(행정제도 분야) 차원에서 지원 중 개발프로젝트 선정, 수행, 평가 과정에서 환경, 인권 등 cross-cutting 이슈에 대한 고려가 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분적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적으로 젠더이슈 등 반영추진 중 ※ 여성 수혜대상 ODA 사업 확대를 위해 여성취터제를 도입하고, 국별연수과정의 여성진문과정 및 프로젝트 사업 확대 등 ※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CP) 사업 진행 ○ 여타 범분야 (젠더, 인권, 빈곤 등) 이슈에 대한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는 중

구 분	권고 사항	개선 방안	2011 기준	'08 이후 개선사항
2-8 민간참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참여 촉진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군총과 관련한 특정 기업 활동촉진 지원 등 민간 개발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비군총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산업 육성 지원, 비군총과 관련된 생산부문 개발지원을 통한 비군친화적 성장유도 방안 연구 등 	(원조 체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적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사업에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개발 중 ○ PPP사업 확대 및 확대 전략 개발 중
3. 대외원조 조직 및 관리				
3-1 관련 부처 · 기관 간 조율 ·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별원조전략(CAS) 활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체제의 분산화에 의한 관계부처·기관 간 조율 미흡 ○ 협력대상국별 통합 국별 원조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유상원조 공통 협력대상국에 대한 단일 국별원조전략(CAS) 통합 중기 국별원조전략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개발협력위를 통해 부처·기관간 조율·협력 강화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사업발굴 단계부터 EDCF 실무협의회, 무상원조협의회 등을 통해 원조사업간 연계 및 일관성 제고 도모중 ○ 현행 통합 중기 국별원조전략(08-10)을 발전시켜 일관성, 효과성 제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진적으로 일반 협력대상국도 협력대상국별로 무·유상 통합된 국별원조전략(CAS) 수립 추진 	(관계 부처, 기관간 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별협력전략 (CPS)을 통해 분산화된 관계 부처·기관 간 사업 조율 및 협력 강화 □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까지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별 협력전략 (CPS)수립
3-2 효과적 원조관리 위한 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을 갖춘 적정수준의 원조담당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력의 효율적 활용 중요 ○ 협력대상국 현지파견 인력 증대(decentr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전문가/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확대 및 경력관리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개발협력기관 등과 인력교류를 통한 전문성 제고 노력 추진 ○ 원조규모 확대에 따라 예산·인력 허용범위 내에서 현지 파견인력 점진적 확대 추진 	(재구성: 정책일관성) (인력 운용) (분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정합성관련 연구보고서 진행 중 □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는 현장 중심 조직개편과 '13년까지 100여명의 인력회충을 위한 목표를 세우 실행 중임 ○ '15년까지 전체 인력의 41%를 현지에 파견할 예정임 ('10년 25%)

구 분	권고 사항	개선 방안	2011 기준	'08 이후 개선사항
3-3 모니터링 · 평가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독립적 평가문화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부처 공동 평가가이드라인 수립 및 독립적 평가문화 구축 ○ 평가결과의 개발사업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개발협력위를 통해 통합적인 ODA 평가시스템 구축 추진(09년 중) 	(M&E)	<input type="checkbox"/> 부분적으로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ODA 정책, 전략, 사업 등 전반에 대한 통합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11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평가를 실시 예정
4. 원조효과성				
4-1 원조효과 성 아젠다	<input type="checkbox"/> 파리선언 이행 모니터링 조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선언 이행 설문조사에 계속적으로 적극 참여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2008 파리선언 이행 설문조사 참여 결과 미흡한 분야 점검, 이행 노력 강화 	(파리 선언)	<input type="checkbox"/>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C 이전 non-DAC 국가로서 유일하게 파리선언 이행 설문조사 참여 ○ 2010년 PD Survey 참여
4-2 주인의식 과 일치	<input type="checkbox"/> 주인의식 증대 및 협력 대상국과의 원조일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대상국 개발우선순위와 일치, 협력대상국 조달시스템사용, 원조 예측성, 안타이드화 수준 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대상국 개발전략에 입각하여 원조사업 발굴 중이며, 협력대상국의 필요(needs)를 파악하기 위한 정책대화를 지속 강화 ○ 협력대상국 조달시스템 활용, 원조 예측성 등은 점진적 강화 방안 추진 ○ 2006년 대비 2008년 조사결과는 일부 개선되었으며, 지속 개선노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대상국 개발우선순위와 일치: 12% → -37% - 능력배양: 74% → 84% - 협력대상국 조달시스템 사용: 0% → 28% - 원조 예측성: 12% → 21% 	(주인 의식과 일치)	<input type="checkbox"/> 부분적으로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대상국 개발 우선순위를 반영한 CPS를 통해 주인의식 제고 및 원조예측성 강화 ○ 조달 시스템 등 협력대상국 시스템 활용을 통한 일치 제고 노력이 더욱 필요
4-3 비구속성 원조 확대	<input type="checkbox"/> 비구속성 원조비율 증대 계획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구속성 원조 확대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구속성화 관련 DAC 권고 이행 계획을 수립,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최빈국 및 고체무빈국(HIPC) 대상 비구 	(엔타이드)	<input type="checkbox"/> 부분적으로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까지 우리 원조 비구속성 비율을 75%로 확대 계획(무상 100%, 유상 50%)

구 분	권고 사항	개선 방안	2011 기준	'08 이후 개선사항
4-4 공여국 간 원조 조화 증대	DAC 최빈국 원조 비구 속화(untying) 권고 이행	속화를 우선 추진 ※ 비구속성화 추진 목표 - 무상 원조 : 08년 30~35%, 09년 35~40%, 10년 50%, 15년 90% 수준 추진 - 유상 원조 : 12년 15~20% 수준으로 확대 (최빈국, 고채무빈국 비구속성화 병행)		※ 우리나라 원조 비구속성 비율(09년 기준) 은 48.4%, DAC 평균은 84.5%
	□ 여타 공여국과 원조조정, 조화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의 개발협력 경험 이 부족한 지역(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조화 도모 중 ○ 타 공여국과의 공동임무(joint mission)수행, 공 동협력대상국분석활동(joint country analytical work), 공동프로젝트 등 계속 확대 계획 ○ 양자간 원조정책대화 활성화 및 공동사업 추 진 ※ 영국, 일본과 정례 정책대화 이외, 08년에 한-EU, 한-UNDP 정책대화 개최 및 일본과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 대상 공동연수사 업, 공동프로젝트 추진 ○ 협력대상국 주도 원조공여국 회의에 적극 참 가하여 공여국간 협력 제고 	(원조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적으로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공여국과의 정례 ODA 정책협의회 개 최(일본, 영국, 캐나다) ○ 선진공여국과 개발협력 MOU 체결(호주, 덴마크, 미국) ○ 협력대상국 원조조화 참여(대부분 공여국 회의에 참여) ○ 기타 원조조화를 통한 구체적인 공동사업 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음.
5. 인도적 지원				
5-1 인도적 지원 정책 정비 및 다자 원조채널	□ 인도적 지원 정책 미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 지원원칙(인도 성, 공평성, 중립성, 독 립성) 반영한 인도적 	□ 08.7월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본 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결의안(RES/46/182) 및 Good Humanitarian Donorship에서 인정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원 칙(인도성, 공평성, 중립성 및 독립성) 존중 ○ 인도적 수요 기초, 원조효율성을 극대화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적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 인도주의 원칙 존중 ○ 인도적 지원에 대한 별도 정책 수립부재
6. 인도적 지원				

구 분	권고 사항	개선 방안	2011 기준	'08 이후 개선사항
확대	지원 정책 수립	수 있는 지원채널 활용 및 모니터링 확보 등 인도적 지원의 체계화 ※ 우리 ODA 예산 증대 규모 및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 확대 등 감안, 인도적 지원 예산 비율 증대 추진 검토		
	<p>□ 다자원조 채널 활용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수요에 기반하고 (needs-based), 양자원조보다는 국제적 조율이 용이한 다자원조, 펀드 구성 등 채널 적극 활용 	<p>□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정책에 다자원조 채널 활용 확대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합동지원요청(CAP: Consolidated Appeals Process) 등 적극 활용 □ CAP, CERF, WFP 등 다자원조채널 활용도 및 지원액 확대 예정 ※ 내년도 관련 예산 증액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P: '08(300만 불) → '09년(600만 불) - CERF: '08년(200만 불) → '09년(300만 불) - WFP(대북지원제외): '06년(10만 불) → '07년(105만 불) → '08년(195만 불) → '09년(대폭 증대) 		<p>□ 부분적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 전문성 활용이 가능하고, 분쟁 등 양 자지원이 어려운 경우 적극 활용 계획